

당국 “3단계, 유럽처럼 ‘록다운’ 아냐”

매뉴얼상 면적 300㎡ 이상 점포 영업 중단해야

사재기 조짐 속 유통업계 ‘집합금지 제외’ 건의

중수본 “면적기준 폐쇄 보단 판매품 중심 운영”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 폐쇄 등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일부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일어난다는 질문에 “(우리의) 3단계는 보통 유럽국가에서 얘기하는 ‘록다운’(lockdown·움직임 제재)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3단계는 (지금의 2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이긴 하나 마트를 봉쇄하고 생필품을 사지 못하는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그런 단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억제·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전국적 대유행에 해당하는 3단계 격상 시 면적 300㎡ 이상 소매 점포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마트 등이 모두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다.

유통업계는 면적으로 따지면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맞지만 생필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필수 시설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제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5일 정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필수 시설인 만큼 영업 중단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더해, 시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5일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 밤 9시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2단계 조치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 더해 일반 상점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아이유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도록 시는 강제하기로 했다.

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3단계 매뉴얼 상에 대형마트 운영 중단이 있다”면서도 “기본 생필품·식료품·의약품 판매 상점을 운영하고 그 외 상점을 중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대형마트는 면적 기준

으로 폐쇄하기보단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질병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고액 알바가 범죄” 광주서 보이스포싱 수거책 3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거책 역할을 한 3명이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포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A(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붙인 연락, 조직단으로부터 송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분 만에 출동, 수거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던 A씨를 붙잡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보이스포싱 수거책 B(43)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1분께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인근에서 보이스포싱 피해자(56·여)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B씨는 보이스포싱 총책으로부터 송금 1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송금한 C(24)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고수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송금 1건 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미끼로 한 금융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포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알바 모집 공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강조했다.

몰래 기른 대마, 던지기 수법 판매 2명 구속 송치

온라인에서 은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2명이 달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몰래 재배한 대마를 온라인으로 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와 B(28)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밀경작한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 대마를 몰래 재배한 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올려 구매자와 채팅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통신단자함 내부 등지에 몰래 대마를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앱만 사용했다. 거래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대표통장)만 썼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일대에서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 국동항 50대 선원 숨진 채 발견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50대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여수해경은 오전 10시께 국동항에 정박해 있던 여선 기관장 A(59)씨가 아침식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선원의 신고를 받고 수중수색한 결과 오후 2시 32분께 물속에서 숨져 있는 A 씨를 인양했다.

해경은 A 씨가 전날 오후 7시 30분까지 다른 배의 선원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인근 선원 등을 상대로 A 씨가 숨지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짜고 친 계약’...간부가 부인 업체 소개

시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나...징계 조치

광주시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이 간부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 천만원대 용역을 밀어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그린카진흥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경징계, 직원 B씨에 대해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열린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관련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7000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찰 공고 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부하 직원 B씨에게 소개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위원 25명 중 4명을

추천해 최종 심사위원에 1명이 참여하는 등 자신의 직무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에 입찰공고 전에 A씨의 배우자와 직접 만나 취업박람회 경향과 트렌드, 성공적인 행사 관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해당 업체 사업 규모 산출을 위한 견적서까지 메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사전에 용역 정보를 알고 사업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해당 업체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 감사위는 A씨와 B씨가 이권 개입과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한 진흥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부적정한 업무추진비도 함께 적발됐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시책

업무추진비는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이 증빙서류에 기재돼야 하지만 그린카진흥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263차례에 걸쳐 25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빙없이 집행해 사용용도를 알 수 없었다.

진흥원은 또 최근 2년간 5차례에 걸쳐 1280만원 상당 청자반상 기세트 등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홍보비로 집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는 행사 관련 기념품, 기관선물 구입 등은 사업성격을 고려해 행사실비 보충금·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같은 기간 11차례에 거친 임직원 체육행사 비용 1300만원도 사용 목적에 걸맞지 않은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김민정기자

전남, 조류독감 이동중지

위반 차량 3대 고발 조치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중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같은달 28일부터 29일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차량 일시이동중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담양지역 알 운반차량 1대와 무안의 가축운반차량 1대, 동물용 의약품차량 1대가 명령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전남도는 오리농장의 AI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료차량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농장 진입을 금지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영암과 나주, 장성 육용오리 농장 5곳과 오리도축장 1곳 등 6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7농장의 오리 16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16일에는 장흥군 오리도축장에 반입된 전북 고창의 오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